

‘촛불 평훼’ 군수 발언 유출 의혹 공무원 ‘외딴섬’ 발령

고흥군 “품위유지 의무 위반·정상 교류인사”… 당사자 “절대 녹음안해”

고흥군이 촛불집회 폄훼발언을 한 군수의 말을 녹취해 외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낙도로 과경해 보복 성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8일 고흥군 등에 따르면 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6급)가 7일 정기인사에서 전남 신안군 흥도관리사무소로 과경 명령을 받았다.

고흥에서 서부권인 신안 흥도까지는 직선 거리로 190km 정도다. 고흥에서 이곳으로 가려면 남해고속도로를 2시간 정도 달린 후 다시 목포에서 폐속선을 타고 2시간 이상 가야 하며 흑산도를 지나야 흥도에 도착한다.

이같은 인사의 발단은 지난해 9월30일 있었던 고흥군수의 발언에

서 시작됐다.

송 군수는 이날 주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발언 도중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무시하는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 발언은 전국으로 걸잡을 수 없이 확산했고 송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진학에 나섰다.

하지만 고흥군은 송 군수의 사과와는 달리 녹취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직원 색출에 나섰다.

고흥군 감사부서는 녹취 파일에 담긴 목소리를 근거로 의심 가는 부서를 찾아 부서장과 팀장급 직원 등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 중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한 4명은 휴대폰을 제출했고, 나

머지 1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A씨는 녹취자로 의심받았고, 결국 신안군 흥도 과경 발령을 받았다.

A씨는 “나는 절대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서 “직권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인권모독 등을 당하는 등 조직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어 상급기관에 유통함을 호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군수의 목소리를 녹취해 외부로 알린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서도 “A씨의 신안군 발령은 정상적인 1대1 과경근무로, 보복성 인사는 아니다”고 해명 했다.

뉴스1

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특히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신안군 관할인 흥도(바닷길 152km)로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권력을 가진 송귀근 군수가 내부고발자를 밝히기 위해 자행한 ‘휴대폰 제출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은 분명한 범행행위다.”고 밝혔다.

고흥=한윤실 기자

민주당 고흥지역위, 성명 내고 송 군수 사죄 요구

더불어민주당 고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송귀근 군수는 인권탄압에 책임을지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는 또 성명을 통해 △송귀근 군수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중단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군정방침 제1호 군민 하나되기에 반하는 모든 행정 및 통

제와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는 “고흥군 송귀근(민주평화당) 군수는 작년 10월 촛불집회가 집단민원 ‘폐렴’과 마찬가지이고 ‘현법 위에 폐렴 있다’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이뤄낸 정권교체와 겸활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역위는 특히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신안군 관할인 흥도

(바닷길 152km)로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권력을 가진 송귀근 군수가 내부고발자를 밝히기 위해 자행한 ‘휴대폰 제출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은 분명한 범행행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A씨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B씨가 수차례 신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세세하게 진정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교수 출신인 신일섭 대표이사의 대학원 제자이고, A씨의 같은 대학원 선배로 알려졌다.

B씨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재단은 처리방안을 논의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조사를 의뢰했다.

재단 관계자는 “A씨가 진정서 제기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해 재단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직장내 성희롱’ 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며 “제주도 사건도 주말에 이뤄진 부분이라 고위간부의 개인적 일탈에 해당해 광주시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의뢰받은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진상조사 후 결과에 따라 특별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산구청 폐기물처리 행정사무 특혜(직권남용) 등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골탕을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그에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광산구청 폐기물처리 행정사무 특혜 고발 기자회견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9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광산구청 장과 구청 공무원, 폐기물처리 업체를 고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 단신 ●

이순신대교 지나던 트럭 실린 컨테이너 바다 추락

이순신대교를 지나던 차량에 실려있던 빙 컨테이너가 강풍으로 해상에 추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여수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52분쯤 이순신대교 중간 지점에서 A씨(65)가 운전 하던 트레일러에 실린 40피트 컨테이너(길이 12m, 폭 2.3m, 높이 2.4m) 1개가 강풍에 떠밀려 해상으로 추락했다. 당시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차량은 광양에서 여수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컨테이너는 바다에 있는 상태였고 교량의 상행선과 하행선 중간에 있는 6m정도의 공간을 통해 바다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교량 난간 일부가 훼손되고 가로등 1개가 파손됐다.

컨테이너가 추락한 해상에는 운행하는 선박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다.

항공특송화물로 7만3천여명 투약 필로폰 밀수

검찰이 태국에서 7만3000여 명이 투약할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9일 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형정)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고, 같은 달 20일 태국에서 필로폰 2.2kg(시가 73억원 상당)을 항공특송으로 받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12월21일 항공특송화물을 찾으려 공항을 방문했다가 항공특송화물에서 미약류를 적발한 세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가 밀수한 필로폰 양은 7만3000여 명이 투약할 분량이다.

A씨는 검찰에 필로폰 밀수 경위 및 공범 등에 대해서 항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서 화재…교사·학생 등 146명 대피

9일 오전 10시14분께 경기 화성시 청계동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 20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소방방비 33대와 소방인력 67명, 화학구조대를 투입해 오전 10시44분께 불길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교내에 있던 146명의 교사 및 학생들이 자력으로 대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총 5층 규모로 연면적 1만2795여평이다. 화재가 최초 발생한 곳은 2층 돌봄교실 분전반이며 화재로 책상, 집기류 등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겨울방학 중 운영되는 돌봄수업이라 많은 인원은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금 문제 다투다 칼부림…살인미수 중국인 송치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포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 노동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인 A씨(38)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 10분쯤 제주시 아리동에 있는 같은 국적 B씨(27) 거주지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일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임금 액수가 다르다고 항의하는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종홍건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 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